

안전기준 위반·불법개조 차량 2만581대 단속

불법 개조 자동차 4411건·이륜차 1800건 적발 등록번호판 위반 자동차 1442건·이륜차 767건



지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개조 자동차와 이륜차의 단속 건수가 2만5000대를 넘어섰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2023년 자동차안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등 자동차·이륜차 총 2만5581대를 단속해 3만 8090건의 위반사항을 시정조치 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전체 단속건수는 전년(2022년)대비 2901

건(10%)이 증가했다. 특히 전체 3만8090건의 위반 사항 중,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가 자동차 2만5812건, 이륜차 385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개조는 자동차 4411건·이륜차 1800건,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자동차 1442건·이륜차 767건으로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 등화 손상, 불법 등화 설치 등 등화장치 관련 위반 항목이 많았

는데, 자동차 8352건, 이륜차 3727건이 각각 적발됐다.

또한 화물차 뒤에 설치돼 뒤따라오는 차량 안전에 영향을 주는 후부 반사판(지)과 후부 안전판 관련 적발건수도 각각 3953건과 903건으로 나타났다.

불법개조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물품적재장치(적재함) 임의 변경 2017건, 승차장치의 임의 변경(좌석 탈거 등) 835건 순으로 적발됐다.

이륜차의 불법개조 항목은 등화장치 임의 변경 1006건, 소음기 개조 494건 순으로 조사됐으며,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번호판 식별불가(오염, 가림행위 등)가 각각 619건, 38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자동차안전단속은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교통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각 항목별로 단속될 시 불법 개조는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안전기준 위반은 점점·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위·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같은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안전단속을 확대하고,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면기자



광주 동부소방, 화재취약시설 관계자 간담회 및 소집교육 실시

광주 동부 소방서는 지난 1일 전일빌딩 다목적강당에서 관내 화재취약시설(공동주택·공장·창고)관계자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소집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완도소방, 설 대비 화재취약시설 현장안전점검

완도소방서는 설을 앞두고 재건축취약시설인 전통시장 소방시설 점검과 시민들의 화재 안전 문화조성을 위한 현장안전점검을 추진했다고 1일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구례소방, 설 명절 대비 화재취약대상 관서장 현장지도

구례소방서는 설 명절을 맞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서장 현장 지도를 실시했다. 구례=박진호기자



무안경찰, 설 명절 맞이 북한이탈주민 위문

무안경찰서와 안보자문협의회는 무안 관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설 명절 맞이 따뜻한 온기 나눔 위문 행사를 하였다. 무안=이기성기자



보성경찰, 협력단체 연합회 출범식 개최

보성경찰서는 지난 1일, 경찰서 4층 보경마루에서 부서별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경찰협력단체들과 참여치안의 파트너십을 도모하기 위해 '협력단체 연합회'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보성=김덕순기자



화순경찰, 설 명절 특별방범활동 전개

화순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기간 집중되는 치안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 명절 특별방범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설 가축전염병 비상대응체계 가동...연휴 전후 전국 일제 소독

8일·13일 방제차량 850대 등 총동원 집중 소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설 연휴 민족 대이동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연휴 전후로 전국 일제 소독을 실시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고 4일 밝혔다.

중수분에 따르면 과거 명절에는 사람·차량 이동이 증가하면서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커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도 증가한다. 2021년에는 설 연휴 4건을 포함해 전후 2주 동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15건 발생했다. 2022년에도 설 연휴 전후로 16건이 집중됐다. 지난해에는 아프리

카돼지열병(ASF)이 설 연휴기간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해 설 연휴 전·후인 8일과 13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방제차량 850대 등 가용한 방역자원을 총동원해 가금·돼지농장과 축산관계시설, 축산차량을 집중 소독한다.

계란 가격에 영향이 큰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8일까지 전국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내 산란계 농장 340호에 대해 소독·방역실태를 점검한다. 연휴 기간에는 10만 마

리 이상 사육 중인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화 예찰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 문자(SMS) 발송, 마을 방송, 현수막, 방송 자막 노출 및 누리집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축산농장 방역수칙뿐 아니라 귀성객 대상 축산농장·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방역홍보도 강화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설 연휴에도 중수본을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가축방역 대응체계를 유지한다"며 "축산농가들은 가축전염병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고, 귀성객은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는 등 가축방역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오유나기자

등초본 교부제한, 가정폭력 피해자 사망시 가족이 해제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는 없어 민원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교부제한 해제사유로 '교부제한을 신청한 사람'인 가정폭력피해자(제한신청자)가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를 규정했다.

그 밖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제한신청자가 사망해 해제를 신청할 주체가 없는 경우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제한신청자가 사망할 경우 ▲제한신청자의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본인에 대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하거나 ▲상속 절차 등의 진행을 위해 다른 법령에서 제한신청자의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한대상자가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본인의 주소가 임의로 공개되지 않도록 교부제한 해제 신청 시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는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행안부는 2월7일부터 3월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40일)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오유나기자



남산골한옥마을 세시올림 입춘첩 불이기

절기상 봄이 시작되는 입춘(立春)인 4일 서울 중구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입춘첩 불이기 행사가 열려 할아버지 윤태근 씨, 할머니 진금자 씨, 외손녀 박서운 양, 손자 윤희원 군이 '입춘대길, 건양다경' 입춘첩을 들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